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4 예산안 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4
예산안 토론회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10. 31.화 15:00 - 17: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진행순서 PROGRAM

| 1 | 개회식 15:00 - 15:15

개 회 사	조 의 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격 려 사	김 진 표	국회의장
축 사	서 삼 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 2 | 발제 및 토론 15:15 - 17:00

좌 장	하 연 섭	연세대학교 교수
발 제	김 동 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최 병 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토 론	강 훈 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송 언 석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혜 영	정의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 상 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성 태 윤	연세대학교 교수

2024
예산안 토론회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10. 31.화 15:00 - 17: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목차 CONTENTS

개 회 사 **조 의 섭** 국회예산정책처장 ····· 7

격 려 사 **김 진 표** 국회의장 ····· 9

축 사 **서 삼 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 11

발 제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김 동 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19

2024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

최 병 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 31

토 론

강 훈 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53

송 언 석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59

장 혜 영 정의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65

이 상 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75

성 태 윤 연세대학교 교수 ····· 87

개 회 사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격려하기 위해 자리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축하의 말씀을 준비해주신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훈식 간사님, 송언석 간사님,
장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를 맡아주신 하연섭 교수님과
발제를 해주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 우리 처 최병권 예산분석실장님,
토론에 나서주실 이상민 나라살림 연구소수석연구위원님,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토론회는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연설과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20년간 그래왔듯이 올해도 저희 처 모든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예산안 심사를 성심성의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총지출 656.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올해보다 2.8% 증가한 규모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세수입 감소로 총수입이 올해보다 줄어들면서
재정수지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적정 재정지출 규모 및 재원배분 방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R&D 예산안의 적정성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내년도 나라살림의 큰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국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서삼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31.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격 려 사

국회의장 **김 진 표**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예정처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와 정부, 학계가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제한적이나마 올해보다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세계 경제 분절화에 따른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큽니다.
특히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재성장률 역시 내년도에는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재정은 60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 여력 저하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생과 인구 감소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담당하는 입법부로서, 이번 예산안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국가재정 지출에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재정 효율을 높이는 한편,
적시에 재정을 투입해 효과도 극대화해야 합니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입니다.
지난해 여야는 작은 차이에 얽매여 예산안 법정시한을 한 달여나 넘겼습니다.
이번에 또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심사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그 악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도 못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서삼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야 의원님들 모두 민생을 위한 최적의 예산안을
적시에 마련하기 위해 헌신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31.

국회의장 **김 진 표**

축 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 삼 석**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정부는 656.9조 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여 약자 복지, 민간경제 활력 제고 등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재투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은 고유가·강달러 기조로 수출 기반의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노출된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확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국제사회 뉴노멀은 한국경제에 변동성을 높이는 불안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고금리에 따른 가계이자 부담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지표 악화 등
서민들의 삶의 무게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움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세입을 살펴보면,
올해 세수 추계 오류로 바닥난 정부 재정이 경기둔화 및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총수입을 감소해 편성하였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등 지방 이전 재원이 감소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허리띠를 강하게 졸라매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세출을 살펴보면,
총지출은 전년 대비 18.2조 원(2.8%)이 증액되었고
내년도 2.8%의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치 수준의 증가율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줄어든 총수입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보니 총지출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늘어나는 국가채무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하고
어려운 세입 여건을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의 역할 역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년 대비 -16.6% 감축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의 시발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카르텔'이란 명목으로 축소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한 번 축소하게 되면
저성장의 늪에서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투자 양극화 행태를 보이는 한국경제에서
혁신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한 혁신에서 그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초연구가 인색한 상황에서 재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도 수준이나마 회복할 것이 요청됩니다.

2024년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인 14.0%를 초과한 16.3%에 도달할 전망이므로
세입 기반과 세율을 새롭게 조정해 미래성장 투자를 위한
R&D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ODA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도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
정부는 2024년도 ODA 투자를 전년도 4.5조 원 대비 2조 원 증가한
6.5조 원으로 대폭 증액해 2030년 달성할 예정인
6.2조 원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ODA 예산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방향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나 그 속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ODA는 상대국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만 속도 낸다고 예산이 연내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적 여건과 민생이 어려울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현실에서
2030년 달성 예정인 목표를 무리하게 앞당겨서 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3% 수준에서 갈수록 떨어져 2023년 3.8% 수준까지 떨어졌고
내년은 3.9% 수준으로 미약하게나마 회복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18.3조 원으로 전년 대비 5.6%p 증가해 18년 만에 농업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넘어섰으나 정부 총지출 대비 2.8% 수준에 그쳐
올해에도 마(魔)의 3%의 벽을 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정과 지역소멸 및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매년 감축 추세를 보이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소멸을 방지할 저출생 및 고
령화 대책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우리 국회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서민·소수·약자들의 복리와 후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에 여·야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정통제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면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법이 정한 기일내에
예산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청 20주년을 맞이해 국가재정의 든든한 길잡이로 자리 잡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3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 삼 석**

2 0 2 4

예산안 토론회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발 제 1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김 동 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발 제 2

2024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

최 병 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2024

예산안 토론회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발 제 1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김 동 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2023. 10. 31.

기획재정부

Ⅰ 2024년 예산안

Ⅰ. '24년 예산안 편성여건

Ⅱ. '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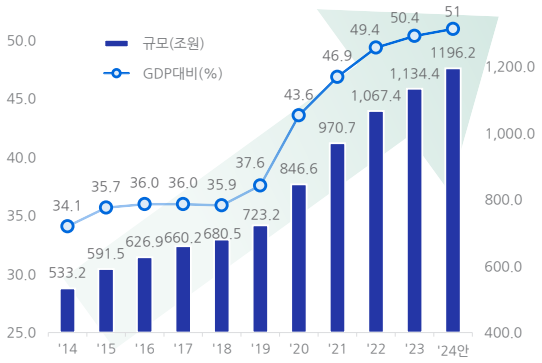
Ⅲ. '24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Ⅰ. ´24년 예산안 편성여건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1. 2024년 예산안 편성 여건

국가채무 지속 증가



지출 경직성 심화

고령화로 인한 복지분야 법정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세*

→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 의무지출 비중(%): ('21) 47.7 → ('22) 49.9 → ('23) 53.3 → ('24안) 53.0

금리인상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의 급격한 증가

→ **재정여력 축소**

* 국채이자비용(조원): ('20) 18.7 ('21) 19.2 ('22) 21.1 ('23) 26.6 ('24안) 30.2

1. 2024년 예산안 편성 여건

불확실한 세입여건	금년	국세수입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 전망
	내년	국세수입 금년대비 △33.1조원 (´23년 400.5→ ´24안 367.4조원)
어려운 민생·경제	대외	이-팔전쟁 확산 우려, 기후변화 등 미래 위험요인 확대
	대내	저출산·고령화,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어려운 여건에도 민생·경제를 위한 투자는 적극 추진할 필요

Ⅱ. ´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2. 20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2. 20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 건전재정 기조

의미	▲불필요한 지출 ↓ + ▲꼭 필요한 투자 ↑
필요성	미래세대 부담, 대외신인도 저하, 물가자극 등
모습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 2.8% → 중장기적 지속 견지
평가	IMF, 10월 "한국의 긴축재정 기조는 옳은 방향. 당분간 지속 필요" Fitch, 10월 "한국정부의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2. 20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 재정정상화

재정누수 차단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타당성·효과성 철저히 점검

총 △23조원 구조조정 단행
(재량지출 20% 수준)

R&D 합리화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난립

국내 중심 폐쇄적 연구

대규모 Flagship 프로젝트 등
집중투자

보조금 재정비

최근 급격한 보조금 규모 확대

부정수급·부당집행 관리 미흡

각종 평가·지적사업 효율화,
관행적 지원사업 정상화

2. 2024년 예산안 전체모습

예산안 총수입

'23년 본예산
625.7조원

'24년 예산안
612.1조원

· (국세수입)
△33.1조원

· (국세外수입)
+19.5조원

예산안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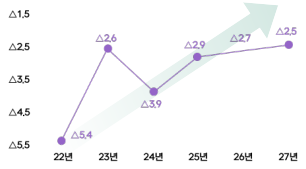
'23년 본예산
638.7조원

'24년 예산안
656.9조원

+18.2조원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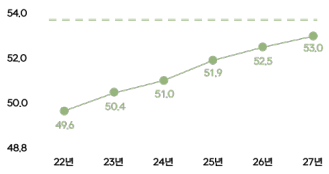
→ 역대최저
증가율

재정수지 중기계획



[중기 관리재정수지 비율]

국가채무 중기계획



[중기 국가채무비율]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참고)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총지출 증가율 2.8%

(단위: 조원)

	′23	′24안	증감	(%)
1. 외교·통일	6.4	7.7	+1.2	(19.5)
2. 보건·복지·고용	226.0	242.9	+16.9	(7.5)
3. 공공질서·안전	22.9	24.3	+1.4	(6.1)
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0	27.3	+1.3	(4.9)
5. SOC	25.0	26.1	+1.1	(4.6)
6. 국 방	57.0	59.6	+2.6	(4.5)
7. 농림·수산·식품	24.4	25.4	+1.0	(4.1)

	′23	′24안	증감	(%)
8. 환 경	12.2	12.6	+0.3	(2.5)
9. 문화·체육·관광	8.6	8.7	+0.1	(1.5)
10. 일반·지방행정	112.2	111.3	△0.9	(△0.8)
11. 교 육	96.3	89.7	△6.6	(△6.9)
12. R&D	31.1	25.9	△5.2	(△16.6)

Ⅲ. ′24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20대 핵심과제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①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② 장애인은 국가 책임지고 돌봄
③ 100만 노인일자리
④ 소상공인 경영 응원 패키지
⑤ 격차없는 다문화 가족
⑥ 청년 생활체감형 지원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① 대규모·도전적 R&D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고도화
③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④ 저출산 대응지원
⑤ 어린이가 걱정없이 자라나는 나라
⑥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① 첨단서비스 분야의 A, B, C, D
② K-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③ 지자체+민간+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④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원 시대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① 군 주거·병영여건 개선
②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
③ 면밀하게 관리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④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 ①

구 분	과 제 명	주 요 내 용
기초생보	"진정한 약자복지 이행을 위한 기초생보 강화"	· 생계급여 인상액 역대 최대 13.2% 인상 * 지난 5년간 인상분(19.6만원)보다 큰 +21.3만원 인상(4인 가구)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30 → 32% * 15년 제도설계 이후 첫 상향
장애인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	· 장애인 지원예산 8.6% 확대 (5.8 → 6.3조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3단계) 1:1 돌봄체계 구축
노인	"노인 일자리 100만명 돌파"	· 노인일자리 역대 최고 수준 증가 * 88.3 → 103.0만명, +14.7만명 · '18년 이후 6년만에 일자리 수당 인상(7% 수준)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 ②

구 분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소상공인	"소상공인 힘내세요, 경영응원 3종 패키지"	·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2배 이상 확대 · 취약차주 高利→低利 정책 자금 대환 신설 (0.5조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비율 최대80% 지원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취업 지원 강화"	· 「초기 정착 지원* → 사회적 격차 완화」 전환 *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아동 언어발달지원 등
청년	"생활체감형 청년지원"	· ①K-Pass, ②산리단길 프로젝트 ③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④청년농 육성 지원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 ①

구 분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저출산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나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 출산가구 주거안정 3종세트(융자, 분양·임대) ·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 최대 1년 6개월 확대 · ①부모급여 70→100만원(0세) ②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둘째이상)
아동	"태어난 직후 모든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준비를 지원합니다"	· 디딤씨앗통장 지원연령 확대 (12세→0세부터)
국가 전략기술	"글로벌 생태계를 주도할 꿈의 Flagship 프로젝트"	· KARPA-H, 우주삼각체계 클러스터 프로젝트 * (총사업비) KARPA-H 1.9조원, 우주삼각체계 클러스터 0.6조원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 ②

구 분	과 제 명	주 요 내 용
K-첨단 클러스터	"민간투자 614조원, K-첨단클러스터가 앞장섭니다"	· ①기술혁신 융자 신설(신규 1,000억원) · ②특화단지 기반시설(용수, 전력, 도로, 폐수 등) · ③산업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공급망	"탄탄한 자원 공급망, 튼튼한 에너지 안보"	· 핵심광물 비축 확대 (평균 42 → 60일분) · 외투·유턴기업 지원 강화 (지원규모 3배 확충)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극복합니다"	·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하청 근로자 복지기금 확대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구 분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첨단 서비스	"첨단서비스 분야의 ABCD"	· ①AI 신기술 개발, ②첨단바이오 예산확대 · ③사이버보안펀드 조성, ④국민체감 행정플랫폼
K-콘텐츠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	· '24년 K-콘텐츠 정책금융 1.8조원 추가공급
지방시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천억원 조성 * 국가 - 지방 - 민간 1,000억원씩 조성
농업직불	"농업직불 예산 3조원 달성"	·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4년만에 3조원 달성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구 분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수해대응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 댐 신규건설(1→10개소), 저수지 준설 (7→77개소) · 홍수 AI 조기경보망과 수해 예측망 구축
국민마음	"국민 마음을 살피고 보듬겠습니다"	· 예방-조기발견-치료-복귀 전주기 투자확대 (2배 이상)
초급간부	"초급간부 처우 획기적 개선으로 우수자원 확보"	· 노후숙소 전량개선 · 단기복무장려금 지원확대 (최대 +300만원)
ODA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 창출"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지원 · 국제사회 지원(재난구호, 식량, 의료 등)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2024

예산안 토론회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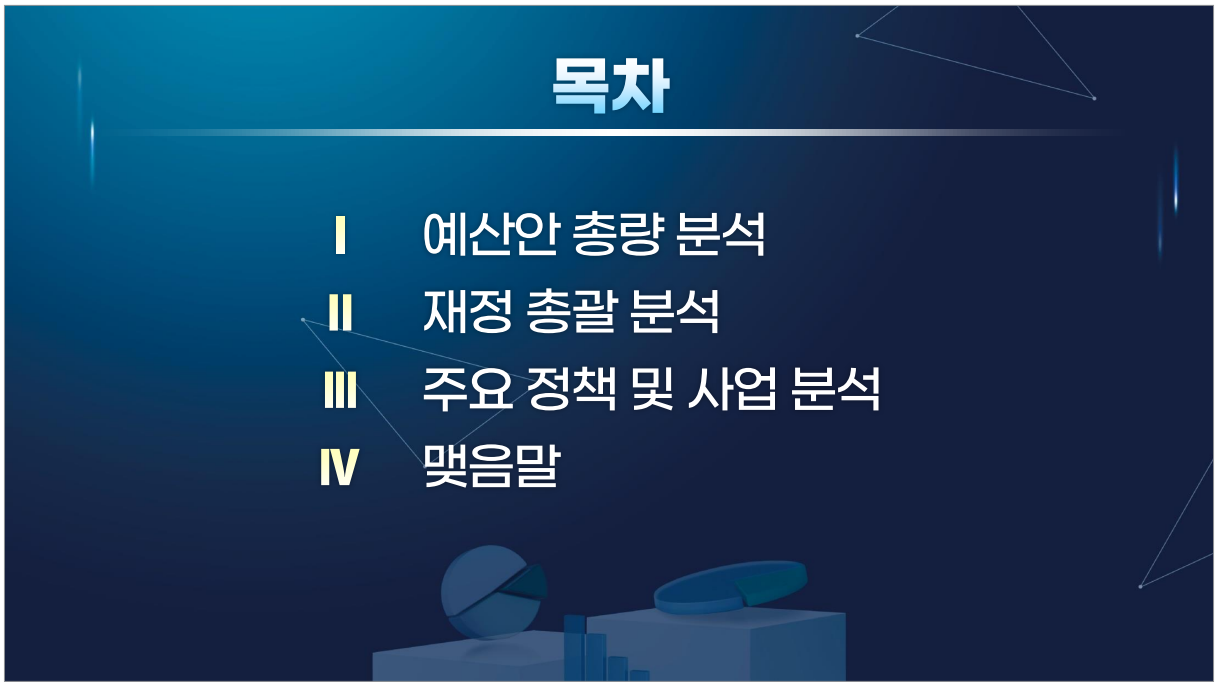
발 제 2

2024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

최 병 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2023. 10.
2024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차
Ⅰ 예산안 총량 분석
Ⅱ 재정 총괄 분석
Ⅲ 주요 정책 및 사업 분석
Ⅳ 맺음말

2024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

Ⅰ. 예산안 총량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예산안 총량 분석

1. 총수입·총지출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총지출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3 예산	2024 예산안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총수입	625.7	612.1	△13.6	△2.2
세수결손 반영	566.6	612.1	45.5	8.0
총지출	638.7	656.9	18.2	2.8

-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 612.1조원**
  - 전년 대비 △13.6조원(△2.2%)
  - 세수결손 반영 시 전년대비 + 45.5조원(8.0%)
-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 656.9조원**
  - 전년 대비 + 18.2조원(2.8%)

4

Ⅰ. 예산안 총량 분석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20~2024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재정수지	통합 재정수지	△71.2	△30.4	△64.6	△13.1	△44.8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112.0 (△5.8)	△90.5 (△4.4)	△117.0 (△5.4)	△58.2 (△2.6)	△92.0 (△3.9)
국가채무		846.0	970.7	1,067.4	1,134.4	1,196.2
(GDP대비)		(43.6)	(46.7)	(49.4)	(50.4)	(51.0)

주: 1. 2020~2022년은 결산 기준, 2023년은 예산, 2024년은 예산안 기준
2.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3.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2024년도 통합재정수지 △44.8조원**
  - 전년 대비 31.7조원 악화
- **2024년도 관리재정수지 △92.0조원 (GDP 대비 △3.9%)**
  - 전년 대비 33.8조원 악화
- **2024년도 국가채무 1,196.2조원 (GDP 대비 51.0%)**
  - 전년 대비 61.8조원(5.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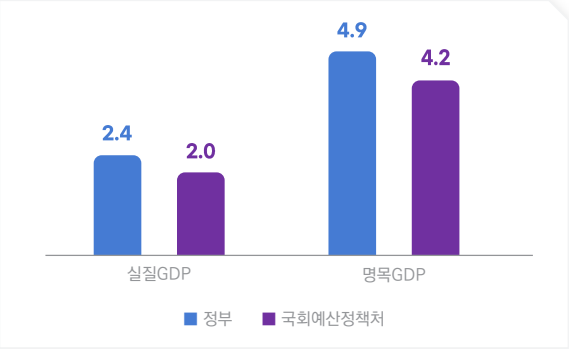
5

Ⅰ. 예산안 총량 분석

3. 2024년 NABO 경제전망

2024년 NABO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단위: 전년대비, %)



-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 :**
  - 실질 GDP 2.0%(정부 전망 대비 0.4%p ↓)
  - 명목 GDP 4.2%(정부 전망 대비 0.7%p ↓)

(단위: 전년대비, %)

구분	2022실적	2023전망	2024전망
실질성장률	2.6	1.1	2.0
명목성장률	3.9	2.2	4.2
민간소비	4.1	2.4	2.2
정부소비	4.0	1.9	2.2
민간투자	0.4	1.5	2.6
실업률	2.9	2.7	3.0
소비자물가	5.1	3.4	2.4
국고채 금리(3년물)	3.2	3.5	3.0

6

Ⅰ. 예산안 총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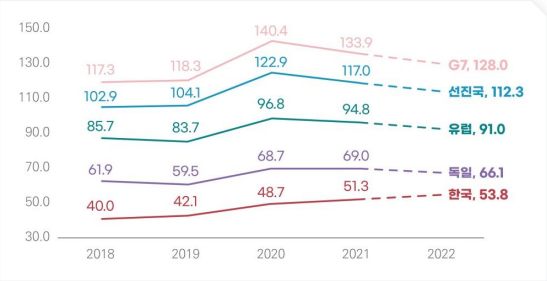
4.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 **2022년 IMF 전망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수준은 선진국 절반 이하 유지**

- **다만, 한국은 최근 D2비율 상승세 지속**
  - 2021년 이후 주요 선진국은 D2 하락세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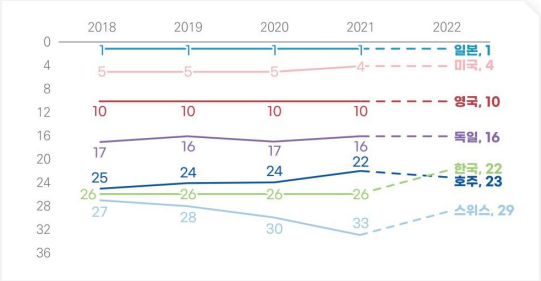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율, %)



※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3.10.

일반정부 부채(D2) OECD 가입국 중 순위

(단위: 순위)



※ GDP 대비 D2 비율이 높은 순서임. 자료: IMF, 「Fiscal Monitor」, 2023.10.

7

Ⅰ. 예산안 총량 분석

5. 재정건전성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단위: 조원, GDP 대비 비율(%))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	625.7	612.1	661.5	692.0	722.3
	총지출	638.7	656.9	684.4	711.1	736.9
	- 의무지출	340.3	348.2	373.3	394.0	413.5
	- 재량지출	298.4	308.7	311.1	317.1	323.4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2.6	△3.9	△2.9	△2.7	△2.5
	국가채무(GDP 대비)	50.4	51.0	51.9	52.5	53.0
NABO 재정전망	총수입	571.2	604.5	649.4	683.4	716.8
	총지출	607.6	655.2	689.3	724.2	756.6
	- 의무지출	321.3	346.5	373.8	401.8	427.4
	- 재량지출	286.2	308.7	315.5	322.4	329.2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3.9**	**△4.3**	**△3.5**	**△3.3**	**△3.0**
	국가채무(GDP 대비)	51.1	52.2	53.4	54.3	55.2

※ 자료: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이행 가능성에 불확실성 상존**

- **NABO 전망에 따르면 정부 계획 대비 관리재정수지 악화 전망**
  -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상회 전망

- **정부 재정준칙안의 2025년 이후 이행가능성 또한 불투명할 것으로 보임**

8

Ⅰ. 예산안 총량 분석

5. 재정건전성

- **과거 추세 대비 정부의 수입 및 지출 전망 가정 상이 → 실현 가능성 검토 要**

- **수입**
  - 2025년 세외수입의 일시적 소요에 따른 급증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3[1)]	2024	2025	2026	2027
세외수입	25.0	27.9	33.6	30.9	29.9
(전년대비)	△4.3	11.6	20.4	△8.0	△3.2

주: 1)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지출**
  - 의무지출 일부 항목 2025~2027년 동일금액 반영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 지원, 의료급여 등)
  - 재량지출 증가율 과거 추이 대비 대폭 축소 (재량지출 증가율 2025년 0.8% vs. 연평균 2013~2022 7%, 2013~2019 4%)

- **재정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 대규모 세수결손 시 재정준칙안의 △3% 이행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확대를 제한함에 따라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 약화 우려
  -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사유에 대규모 세수결손 포함 등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재정준칙안 개선과 함께 초과세수 발생 시 국채 상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보완방안도 검토 필요

9

2024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

Ⅱ. 재정 총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Ⅱ. 재정 총괄 분석

재정운용방향

- **경기침체 대응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의 책임성 및 효과성 제고 노력 필요**

-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로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약화**
  - 경제성장률 1%대 초반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수결손에 따라 정부지출은 오히려 축소 우려
  - 2022년 4분기 이후 민간 부문이 위축되면서 정부 부문이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2분기부터 정부 부문 성장기여도 둔화

※ 올해 분기별 정부 부문 성장기여도 (전년동기대비, %p)
☞ (1분기) 1.0 → (2분기) 0.3 → (3분기) 0.1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단위: 전년동기대비, %, %p)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과도하게 삭감된 R&D와 투자활성화 등 시급한 과제에 재원을 재배분할 필요**

11

Ⅱ. 재정 총괄 분석

1. R&D 예산안 분석(1) - 개요

- **2024년도 R&D 분야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조원(16.6%) 감액한 25.9조원 편성**
  -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4.9%('23) → 3.9%('24)로 **1.0%p 감소**
  - R&D 수행 총 31개 부처 중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를 제외한 **28개 부처는 감액**

R&D 예산안 부처별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구분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B-A	(B-A)/A
과기정통부	96,558	87,599	△8,959	△9.3	농진청	9,022	7,174	△1,848	△20.5
산업부	54,324	46,838	△7,486	△13.8	국토부	5,571	4,225	△1,346	△24.2
방사청	50,823	46,424	△4,399	△8.7	질병청	2,008	2,202	194	9.7
중기부	17,701	13,208	△4,493	△25.4	식약처	1,405	1,452	47	3.3
교육부	28,804	11,543	△17,261	△59.9	기타(21개)	37,007	30,142	△6,865	△18.6
복지부	7,555	8,345	790	10.5	합계	310,778	259,152	△51,626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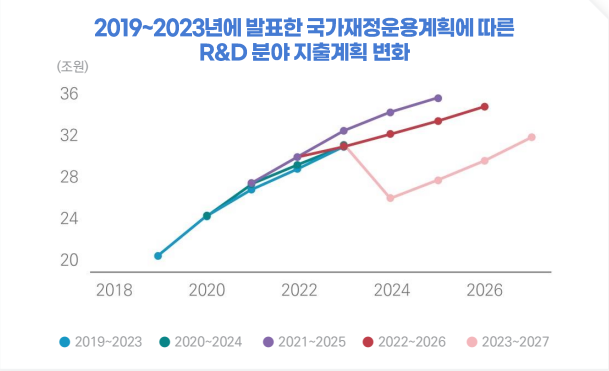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2

Ⅱ. 재정 총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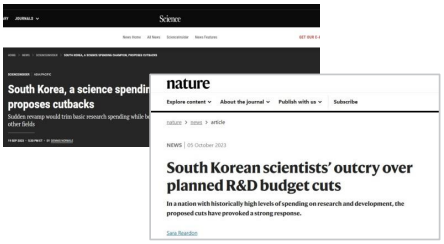
1. R&D 예산안 분석(2) - 투자계획의 적절성

R&D 분야 중기 재정지출 계획의 일관성 부족, 급격한 예산 감소로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 저하



정부 R&D 예산 감소는 국가 R&D 투자에서의 정부 역할 축소 의미

- 정부 R&D 감소에 따라 민간의 대응 투자 등 국가 全 R&D 투자 축소 우려
- 세계 3대 과학기술지인 사이언스와 네이처도 한국 정부의 R&D 삭감 내용 보도



13

Ⅱ. 재정 총괄 분석

1. R&D 예산안 분석(3) - 비R&D 전환 및 조기종료

- **법령·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R&D → 비R&D 전환**
  - R&D로 분류되던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및 학술활동 지원 사업, 각 부처 정책연구사업 등 1.8조원('24년 기준) 규모를 비R&D로 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대학의 특정목적지원사업, 학술지원 사업, 정책연구사업을 R&D 대상으로 분류
  -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도 대학의 특정목적지원 사업은 성격이 혼합된 경우 연구개발부분을 분리하여 R&D 통계로 포함하도록 명시

→ 비R&D → R&D로 재분류 필요

- **조기종료에 따른 R&D 사업의 기획 미흡, 정책의 일관성 부족, 매몰비용 발생 우려**
  - R&D 종료사업(158개) 중 당초 계획에 따라 종료되는 142개를 제외한 16개 사업은 계획과 달리 조기에 종료 결정(2023년 570억원)

조기종료 사업 사례

구분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중기부)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 환경 구축(과기부)
내용	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및 장비 서비스 바우처 지원	온라인 상 수학/과학 가상 실험 콘텐츠 개발 및 공개 활용
사업기간	(당초) 2023~2025 (변경) 2023	(당초) 2022~계속 (변경) 2022~2023
지원규모	(2023) 90억원	(2022) 14억원 (2023) 13.8억원
분석의견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활용 필요성 고려 필요	사업 폐지로 기 구축 플랫폼에 대한 매몰비용 발생

14

Ⅱ. 재정 총괄 분석

1. R&D 예산안 분석(4) - 계속사업 감액 과다

• **2023년 R&D사업(1,486개)의 54.7%인 813개 세부사업의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

- 이 중 50% 이상 감액 사업이 318개로 전체의 39.2% 차지

구분	~30%	30%~50%	50%~70%	70%~80%	80%~90%	90%~100%	합계
사업 수(개)	374	121	102	59	123	34	813
비중(%)	46.0	14.9	12.5	7.3	15.1	4.2	100.0

• **50% 이상 감액된 사업 318개 중 81.7%(260개)는 구체적 사유 없이 "기타 정책여건 등 반영"을 이유로 감액 편성**

구분	가시적 성과 미흡	평가결과 반영	단기 급증 사업	당초 계획에 따른 자연감소	기타 정책여건 등 반영	합계
사업 수(개)	13	4	4	37	260	318
비중(%)	4.1	1.3	1.3	11.6	81.7	100.0

15

Ⅱ. 재정 총괄 분석

1. R&D 예산안 분석(4) - 계속사업 감액 과다

① 중장기 목표달성 차질 및 기 구축 장비 사장 우려

•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 사업(과기부, 14억원)은 2022~2023년 인공지능 공개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컴퓨팅 환경 구축
→ 2024년 대회 개최 비용 미반영으로 旣 구축 장비 활용 불가

② 타당성이 검증된 장기 기획과제 투자 축소 문제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산업부, 3,425억원)은 예타를 통과해 타당성이 旣 검증된 장기 기획과제(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를 감액 편성하여(△20.8%) 중장기 성과목표 달성에 차질 우려

③ 2024년 예산 축소가 2025년 이후의 재정부담 초래

•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사업(과기부)은 예산안 감액에 따라 장비 구축 계약에 따른 납부 금액을 2025년 이후로 순연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당초(A)	78	115	110	-	-	303
변경(B)	78	15	135	38.5	36.5	303
B-A	0	△100	25	38.5	36.5	0

④ 민간에서 대체할 수 없는 분야 예산안 감액으로 관련 R&D 공백 발생 우려

구분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해수부)	전파연구 (과기정통부)
내용	미세플라스틱 오염 평가기준 등 수립	ICT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기술 기준 제·개정 시험연구
2024 예산안	11억원 (전년 대비 △87.7%)	순감 (2023년 9억원)

16

Ⅱ. 재정 총괄 분석

1. R&D 예산안 분석(5) - 국제협력 R&D

• 2024년 국제협력 R&D 사업 예산안은 2023년 0.5조원 대비 1.3조원(260.0%) 증가한 1.8조원

- 현행 법령 상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의 법적 근거,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국제협약 및 지식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공통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① 협력 상대국이 미정이거나, MOU 체결 등 구체적인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사전준비 현황을 점검하여 준비 미흡 시 감액 필요

-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 중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과기부, 100억원),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중 핵심기술·융합기술(과기부, 27억원)은 협력 상대국이 미정인 상황
-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과기부, 25억원),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의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바이오혁신기반조성(과기부, 147억원)은 상대국과 MOU 및 협력의향서 등 미체결

② 일부 신규 내역사업은 예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예산안 편성, 타당성 검증 필요

구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산업부)	글로벌 진출 및 파트너링 촉진 우수 신약개발(복지부)
사업기간	2024~2028	2024~2030
2024년 예산안	665억원	191억원
총사업비	6,870억원	미정(약 1,300억원)
분석의견	예비타당성조사 후 추진 필요	당초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 신설 부적절

17

Ⅱ. 재정 총괄 분석

1. R&D 예산안 분석(6) - 출연연구기관 예산안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의 2024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89억원(25.2%) 감소한 8,859억원

(단위: 억원, %)

구분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25개 출연연구기관	11,848	8,859	△2,989	△25.2

※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비를 제외한 기관 고유 목적 사업비의 합계임

• 2024년 예산안 감소로 25개 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 필요

- 25개 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등 비정규직 인력은 총 7,141명으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정원 포함 전체 인원(2만 3,370명)의 30.6%를 차지하여 출연연 연구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역할 수행 중

(단위: 명)

구분	정규직(정원)	무기계약직(정원)	비정규직(현원)	박사후연구원(현원)	학생연구원(현원)	합계
인원	14,789	1,440	1,529	1,638	3,974	23,370

- 2024년 예산안 감소로 25개 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등의 인건비 확보가 곤란한 상황으로,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용과 연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편성한 기관 간 융합연구 예산(1,000억원)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방안 검토 필요

18

Ⅱ. 재정 총괄 분석

2. 세수 결손에 따른 예산 편성·집행

정부 2023년 세입 재추계 결과 △59.1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발표(2023.9.)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연관성이 낮고 외환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2023~2024년 2년간 외평기금으로부터 63.5조원(2023년 20조원, 2024년 43.5조원) 내외의 원화재원 조달 추정

[지방교부세·교부금 미교부]

- 재정여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부담이 가중될 우려

[2024년도 재해대책비 예산 편성]

- 세수결손의 영향으로 2023년 피해복구비 국비부담분(1.2조원) 중 8,953억원을 2024년도 부처별 재해대책비 예산안에 편성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유예]

- 일반회계가 적자보전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적자국채 이자의 6월분·9월분 상환을 유예한 것은 부적절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

- 세수결손의 영향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재원이 부족해 보험가입자들의 자산인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 차입(정보통신진흥기금)

19

Ⅱ. 재정 총괄 분석

3. 국방 첨단전력 강화

• 국가간 기술격차 및 수출전략 고려한 R&D 투자 필요

- 항공기, 무인기, 유도미사일 등 대표적 국방 첨단전력 강화 필요
  ※ 선진국 대비 항공기,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에서 상대적 약점 vs 화포 등 재래식 무기는 강점
- '24년도 국방 R&D 예산안은 항공기, 유도무기 분야에서 전년대비 큰 감소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2024(안)	증감(금액 및 비율)	
항공기R&D	285,977	208,966	△77,011	△26.9%
유도무기R&D	556,477	346,101	△210,376	△37.8%

- 사업타당성조사 진행 중인 사업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 필요
  ※ 보라매(양산), 고고도 요격유도탄(L-SAM-Ⅱ),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등

• 미래 전장환경 변화 고려한 드론 등 전략자산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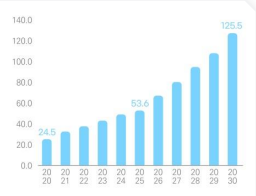
- 병력자원 감축, 정보 및 화력집중 필요성 등에 대비한 드론 기술 확보 필요
- 기존 국방 R&D 사업의 한계 보완을 위한 획득방식 다변화
- 민간·군용 드론기술의 연계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개선노력 필
  ※ 상용드론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인해, 드론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제한되는 상황

전세계 무기별 수출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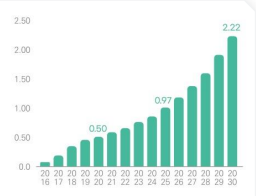
해외 드론시장 전망

(단위: 조원)



국내 드론시장 전망

(단위: 조원)



20

Ⅱ. 재정 총괄 분석

4. 외교·통일 분야 ODA 예산

• 재정여력을 고려한 ODA 예산 적정성 검토 필요

- '24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5%(1.2조원) 증액된 7.7조원으로 12대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ODA 사업 규모증가*가 주요 요인임
- 최근 5년간 외교·통일분야 연평균 증가율은 5.8% 이며, 외교통상 부문은 7.8%, 통일부문은 1.7%임

  * 외교·통일분야 외 다른 분야에 해당되는 ODA 예산은 전년대비 2조원(4.5 → 6.5조원) 증액

-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과 내년도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고려할 때 외교·통일분야 예산증가(특히 ODA)의 적정성 검토 필요

(단위: 조원, %)

	2023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024	전년대비 증가율
외교·통일 분야	6.4	5.8	7.7	19.5
외교·통상	5.0	7.8	6.5	31.8
통일	1.5	1.7	1.1	△22.2

- 우크라이나 재건(3억불)은 차관(유상, 1억불), 현물 등(무상, 2억불)으로 전시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어 수원국의 실수요 파악과 집행가능성 고려 필요
- 글로벌펀드 약정액(1억불)은 3년 (2023~2025년)간 납부계획으로 2024년도에 2천5백만불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이연 집행 고려 필요
- 국가별 협력사업에서 계획의 구체성 및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지출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를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미얀마는 수원국의 정세불안으로 불용률이 높음에도 예년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인도(ODA)는 사업 집행률이 2년 연속 70% 미만임에도 증액

21

Ⅱ. 재정 총괄 분석

5.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2018~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현황

회계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1,356	1,667	1,881	1,274	1,631

주: 2018~2021년은 국회 의결 기준, 2022년은 상임위원회 의결 기준

2022회계연도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 중 **예산규모 조정 관련 시정요구의 유형별 건수** (단위: 건수)

- 집행 지연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규모 예산편성 요구 **273**
-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요구 **66**
- 사업 성과 저조에 따른 예산 조정 요구 **32**
- 관련 법령 미비·부족,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및 기타 사유로 예산 조정 요구 **24**

총 395건

•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예산안에 반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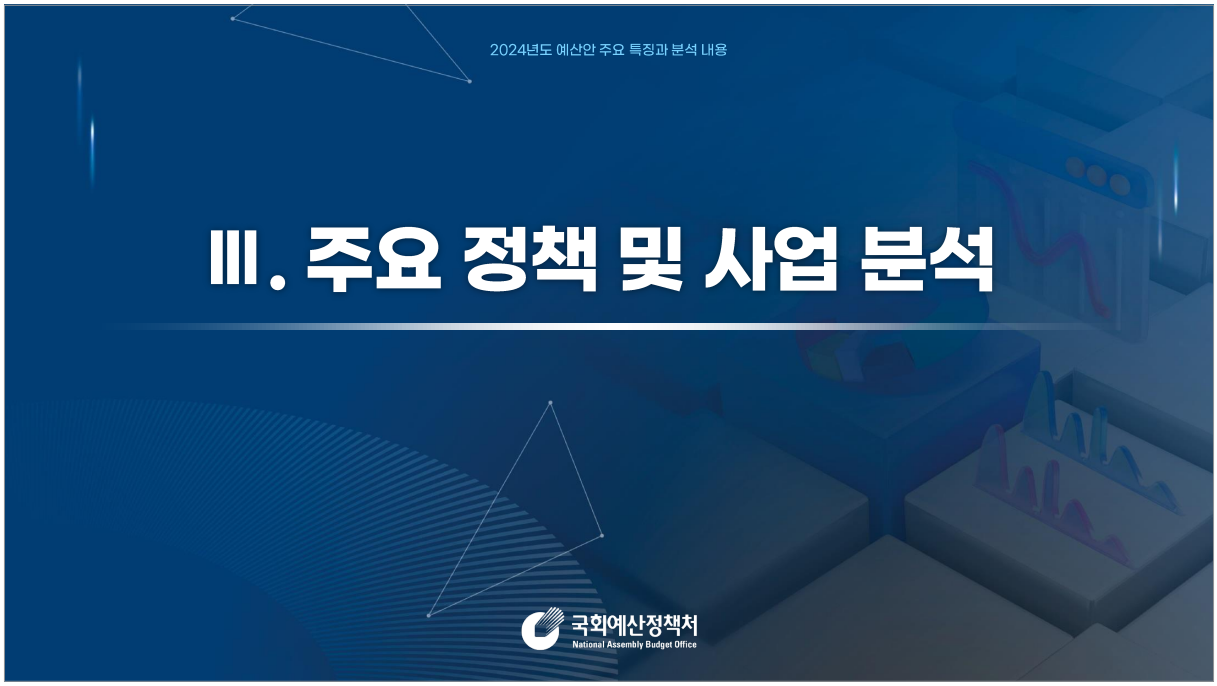
- 예결위 결산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임위 심사결과 활용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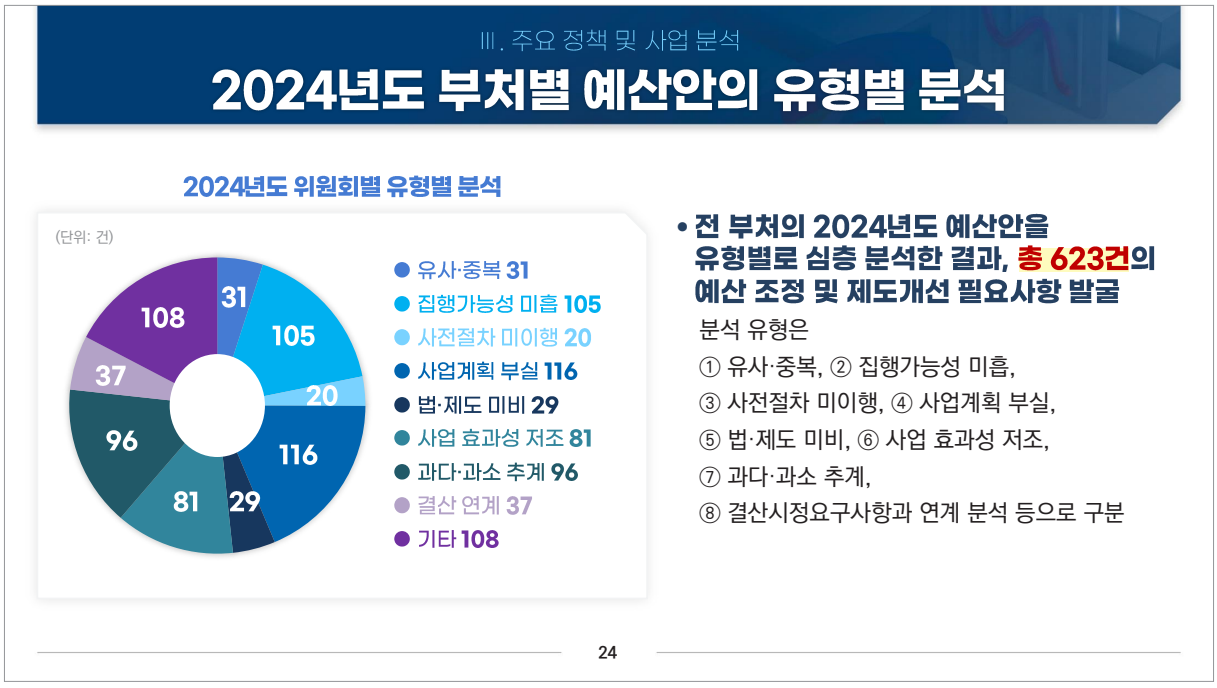
• 2024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일부 사업에서 상임위 시정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

상임위 시정요구사항 미반영 사업 현황

부처	사업명	시정요구	예산안 편성 현황
통일부	통일+센터 설치·운영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보조금 교부 ('22 실집행률 10%)	당초 계획대로 3차년도 사업비 편성
산자부	무역보험 기금 출연	기금운용배수 변동성 고려한 출연금 지원 필요	기금운용배수가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당시전망 보다 하락
국방부	무관부 차량 구입·유지	국방무관 차량 제공 적절성 검토 및 운영계획 마련 필요	전년도 예산에 기준환율 인상분만 반영하여 편성

22


2024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
Ⅲ. 주요 정책 및 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Ⅲ. 주요 정책 및 사업 분석
2024년도 부처별 예산안의 유형별 분석
2024년도 위원회별 유형별 분석
(단위: 건)
31
105
20
116
29
81
96
37
108
유사·중복 31
집행가능성 미흡 105
사전절차 미이행 20
사업계획 부실 116
법·제도 미비 29
사업 효과성 저조 81
과다·과소 추계 96
결산 연계 37
기타 108
• 전 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을 유형별로 심층 분석한 결과, 총 623건의 예산 조정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분석 유형은
① 유사·중복, ② 집행가능성 미흡,
③ 사전절차 미이행, ④ 사업계획 부실,
⑤ 법·제도 미비, ⑥ 사업 효과성 저조,
⑦ 과다·과소 추계,
⑧ 결산시정요구사항과 연계 분석 등으로 구분
24

Ⅲ. 주요 정책 및 사업 분석

1. 유사·중복사업 분석

• 2024년 예산안 분석 결과, 16개 부처 총 26개 사업 (1,637억원)이 유사·중복으로 파악

-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간 유사·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를 통해 재정 효율성 제고 필요

(단위: 개, 억원)

구분	신규 추진 재검토	중복지원 배제	사업간 통합	사업간 연계	차별성 강화	합계
사업수	2	6	5	5	8	26
예산안	300	233	338	226	540	1,637

[유사중복 사업 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aaS 혁신펀드(200억원)'는 금융위원회의 '성장지원펀드'의 자펀드 투자분야에 SaaS가 이미 포함되어 중복되므로, 신규출자 필요성 재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보안펀드'(200억)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1,500억원)은 모태펀드 내 계정으로, 지원대상 및 투자분야 간 중복 우려

25

Ⅲ. 주요 정책 및 사업 분석

2.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 분석(1)

• 청년도약계좌 개요

-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출시된 만기 5년 정부지원 금융상품
  ·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구분	내역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19세~34세) - 개인소득 요건: 연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미지원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3.0~6.0%)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지원
납입한도	월 70만원
가입기간	5년

• 2024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에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 등에 필요한 출연금 지급
- 2024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1,322억원(35.9%) 증액된 5,000억원 편성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367,801	499,994	132,193	35.9
- 기여금지원	344,037	489,043	145,006	42.1

26

Ⅲ. 주요 정책 및 사업 분석

2.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 분석(2)

• 2024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의 문제점

① 신규가입 규모 등 수요예측 과다

• 2023년 9월부터 2024년 말까지 월 15만명 신규가입 가정
- 2023년 7월 출시 이후 가입규모 감소 중
- 2023년 9월 신규가입자는 4.4만명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자 추이 (단위: 만명)

가입시기	2023.7.	2023.8.	2023.9.
가입자 수	25.3	12.5	4.4

• 청년희망적금 만기유지 예상인원의 78%인 145만명이 2024년 3월 만기시점에 동시가입 가정

②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 일시납입 허용 관련 형평성 문제 등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의 일시납입 허용 및 기여금 일시지급 (10.18. 변경계획 제출)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에 한정한 일시납입 허용
  → 일반가입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 고려 필요
- 과다한 수요예측에 따른 실집행 가능성 우려에 사업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부적정
  → 대규모 세수 부족 등 재정 여건 감안할 때 지양 필요

27

Ⅲ. 주요 정책 및 사업 분석

3. 코로나19 백신 도입 사업 분석

• 코로나19 백신 도입 사업 예산안 3,619억원 반영

- 65세 이상 인구 및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총 750만 회분 신규 도입 예산 편성

(단위: 억원)

구분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코로나19 백신 도입	2,151	3,619	1,468	68.3

2023년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단위: 만 회분)

주: 1. 2023.9.30. 기준
2. 감축물량 2,265만 회분(코백스 1,265만, 모더나 600만, 안센 400만) 제외
자료: 질병관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코로나19 백신 신규 도입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023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감소
  · 2023.8.31. 기준 2가 백신은 60세 이상 고령자 및 면역저하자 1,500만명 중 506만명만 접종
  *2가 백신 접종률: 60세 이상 34.5%, 면역저하자 29.0%
- 신규백신으로 전환 도입 중인 물량 및 도입 예정물량 등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 물량을 적극 활용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신규 도입 예산 불필요
  · 코로나19 백신 총 가용물량: 6,495만 회분

28

Ⅲ. 주요 정책 및 사업 분석

4.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 **2024년 BTL 총한도액안은 전년 대비 1조 7,826억원(69.5%) 감액된 7,826억원**
- **2024년 신규 BTL사업은 교육부 등 3개 부처의 총 19개 사업**

2024년 부처별/대상시설별 BTL 한도액안 (단위: 억원)

구분	부처명	시설유형	한도액안
국가 사업	교육부	대학시설	5,226
	국방부	국방시설	931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	환경부	완충저류시설	487
		하수관거시설	810
예비한도액(총한도액의 5%)			373
합계			7,826

-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VfM 분석)' 결과 적격성 미확보 사업 다수가 한도액안에 포함**
  - 국방부 2개 사업: 민간투자 적격성 미확보
  - 교육부 9개 사업: 민간투자 적격성 미확보/임의적 계수조정
- **정성적 VfM 분석 미실시/미흡**
  - 정량적 VfM 분석 결과 외에도 사업추진의 용이성, 사업특수성, 파급효과 등 정성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나 적격성 조사 단계에서 검토 미실시/미흡
-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 결과와 정책적 필요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BTL 사업별로 승인 여부를 검토할 필요**

29

Ⅲ. 주요 정책 및 사업 분석

5.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1) 현황

- **농업 고용인력(임금근로자)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감소**
  - 농가 경영에 있어 노무비 부담 증가[(2015)100 → (2022)152.9]
  -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른 농업 생산 차질 야기

- **농업경영주 감소 및 고령화**
  - 청년농(40세미만) 비중: (2000) 6.6% → (2020) 1.2%
  - 신규 유입 인원 감소로 농업 지속가능성 약화

2) 분석 의견

- **농업 고용인력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단기 외국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적 운용
  - 전문기관 지정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확립(미등록외국인 고용 비중 85%)
  - 국내 노동력 중개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실적 개선(목표대비 인력 운영실적 76%)
- **청년농 육성 목표(2027년까지 3만명) 달성 노력 필요**
  - 2018년 청년농 육성정책 본격 추진 이후 아직 성과가 뚜렷하지 않음
    ※ 청년농 규모(비중): (2018) 7,624명(0.7%) → (2022) 7,036명(0.7%)
  - 영농준비 단계 재원배분 확대 필요(2024년 예산안 기준 준비단계 1.4%)
  - 영농정착지원금 관리 강화(2023년 기준 의무사항(영농유지 등) 위반 13.0%)
  - 청년농 수요(밭 중심)에 부합하는 농지지원 확대(농지은행 논 중심 매입)

30

맺음말

-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는 상황
- 이에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예산 등의 조정을 통해 **R&D**, **민간투자 활성화** 등에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또한, 세수 결손 대응에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초과세수 발생 시 국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참고]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발간 목적

- 재정위험 요인인 인구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첨단기술 육성 전략, 인재양성 등 재정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

발간 일정

- 2023년 11월초 별도 발간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총 6권으로 구성

	제목	주요 내용
1	총론	발간배경, 분야별 분석 요약, 종합 제언
2	인구변화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	인구전망,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3	저출산 대응 전략	해외사례, OECD 주요국 대비 저출산 대응수준, 분야별 성과분석 등
4	이민정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	이민정책 추진체계, 전문인력·기능인력·유학생 유입·관리정책 분석 등
5	첨단기술 대응 전략	인공지능·우주개발·로봇기술의 산업·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쟁력 분석 등
6	인재양성 전략	인재양성 정책·사업 추진체계, 인재수급동향, 주요국 경쟁력 분석 등

2024

예산안 토론회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토 론

강 훈 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송 언 석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혜 영	정의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 상 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성 태 윤	연세대학교 교수

2024

예산안 토론회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토론 1

강 훈 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토론문

강 훈 식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I. 대한민국 경제 상황

▨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4% 전망

- 18년 만에 1인당 GDP가 대만에 추월당했고,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뒤처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소비, 투자, 무역수지 등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모든 부문이 어려운 상황

- 정부 지출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수단임에도,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선언
- 지난 10년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지만, 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
- 올해 세입 추계 실패가 불러온 59.1조 원의 세수결손이 큰 원인

  ⇒ 정부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 세입기반 훼손 우려

| 2024년 예산안 재정총량 |

단위 : 조원, %

	'23년 예산(A)	'24년 안(B)	증감 (B-A)	증가율(%)
▤ 총 수 입	625.7	612.1	△13.6	△2.2
• 국세수입	400.5	367.4	△33.1	△8.3
• 국세외 수입	225.2	244.7	+19.5	8.7
▤ 총 지 출	638.7	656.9	+18.2	2.8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13.1 (△0.6)	△44.8 (△1.9)	△31.7 (△1.3%p)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58.2 (△2.6)	△92.0 (△3.9)	△33.8 (△1.3%p)	
▤ 국가채무 (GDP대비)	1,134.4 (50.4)	1,196.2 (51.0)	+61.8 (+0.6%p)	

II. 2024년도 예산안의 문제점

▨ 수입이 줄어들어 지출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을 위배

-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국회에 제출
- 그러나 2024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약 100조 원에 이르는 92조이며, 이는 GDP 대비 3.9%

▨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 R&D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대비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R&D 예산 삭감이 이뤄짐

  * R&D예산(조원) : (10) 13.7 (11) 14.9 (12) 16.0 (13) 17.1 (14) 17.8 (15) 18.9 (16) 19.1 (17) 19.5 (18) 19.7 (19) 20.5 (21) 27.5 (22) 29.5 (23) 31.1 (24안) 25.9
- R&D 사업 1,620개 중 67%에 해당하는 1,076개 사업 감액 (총 6.5억)
- 연구실에서 박사후연구원, 대학원생을 줄이려는 움직임 가시화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이 매출 증대, 종사자 증가, 지역 균형 발전 등의 경제적 효과있는 것으로 결론

- 그러나 정부는 지역사랑품권 예산 전액 삭감 편성
- 고물가로 힘겨운 시기 보내고 있는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 재검토 필요

▨ "약자복지" 강조하지만, 복지사업 다수 삭감 편성

- 노인요양시설확충, 청소년 사회안전망,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어린이집 확충 등

  * 노인요양시설확충 547억 6,000만 → 215억 5,000만

  청소년 사회안전망 720억 7,000만 → 679억 8,000만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263억 3,000만 → 236억

  어린이집 확충 사업 491억 4,000만 → 416억 2,000만

▨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 예산과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도 삭감 편성

* 새만금청 새만금개발사업 지원 11.5조 → 1.1조

역사 왜곡 대응 연구사업 20억 2,800만 → 5억 3,600만

독도주권수호 5억 1,700만 → 3억 8,800만

III. 역대급 세수결손

▨ 2024년 예산안의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수결손

▨ 정부, 세수결손 △59.1조원 전망하면서 대응방안 발표

1)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하여 대응

2)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

('21년 3.7조원, '22년 7.9조원)도 고려하여 관리

3) 금년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5조원 감소함에 따라지방교부세(금)

23조원 수준 감액,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보전

*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34조원, 적립기준), 세계잉여금(7조원) 등 약 41조원 수준

▨ 그러나 정부 대책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자지출이 우려됨

- 지방교부세(금) 감액 대응 위해 지방정부와 교육청 추경편성과 시도의회의 의결 필요
- 지자체별 가용 가능한 자체재원 점검 필요(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 약 24조 원의 기금 여유 재원 활용 → 약 4,800억 이자지출 예상

⇒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추경으로 세입 경정을 하는 것

IV. 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

▨ 2024년도 예산, 얼어붙은 대한민국 경제 해빙시키는 마중물 역할 해야

▨ 불요불급하고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다수 확인된 만큼, 이번 예산안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송곳 심사를 통해 바로잡고, 국민 중심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

-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홍보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불필요하게 증액 편성된 부처를 중심으로 감액 조정 필요
- 코로나19가 불러온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된 예비비가 전년 수준으로 똑같이 편성된 점도 그 사유에 대한 면밀한 심사 필요
- 그 외에도 사전 절차 등 관련 준비가 미흡한 사업, 법적 근거가 부족한 사업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
- 대통령 순방 예산은 과거의 성과를 살펴 꼼꼼히 심사하고, 관변단체 보조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

  ⇒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민생경제를 위한 예산은 물론, R&D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증액을 추진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액 필요 사업 제시 예정

V. 결어

▨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제1원칙은 "재정민주주의 실현"

▨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예산심사

▨ 국민중심 예산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2024

예산안 토론회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토론 2

송 언 석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예정처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송 언 석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재정의 역할

- 재정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 운용의 중요한 정책수단
- 정부는 경제 상황과 경기 여건에 따라 재정을 확장 또는 축소 운용하며, 이에 더해 성장·물가 안정 등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도 크게 변동 운용
- 재정 정책이 최대·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타 정책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노력이 필요. 물가 안정을 위한 금융·통화정책과의 조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
- 재정을 투자할 때에는 효율성과 시급성, 생산성 등이 면밀히 고려되어야 함. 단순히 이전지출을 늘리는 것은 재정 퍼주기 또는 포퓰리즘에 불과

▨ 우리 재정의 현주소와 2024년 정부 예산안

- 2024년 정부 예산안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무려 1,196.2조원
- 국가채무의 양보다 심각한 것은 증가 속도. 과거 70년 동안 형성한 국가채무가 600조원 수준이었는데, 지난 정부 5년 만에 400조원 급증
- 총지출 역시 지난 정부 5년간, 200조원 이상 증가(2017년 400조 5천억원 → 2022년 607조 7천억원)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6.0% → 2022년 49.4%. 5년 만에 13.4%P 상승
- 단순히 국가채무의 규모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재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 소요는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 주요 선진국들의 고령사회 진입 당시의 국가채무비율이 독일 18.6%, 덴마크 20.5%, 프랑스 21.1%, 스웨덴 27.9% 등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7년 당시의 국가채무비율은 36.0%로써 이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특히, 이 때로부터 불과 7년이 경과하는 시점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2024 정부 예산안 기준)이 51.0%까지 치솟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총지출, 국가채무 규모 |

단위 : 조원, %

구분		총지출(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규모	증가율	정부 평균	규모	GDP 대비
이명박 정부	2009년	284.5	10.6	5.9	359.6	29.8
	2010년	292.8	2.9		392.2	29.7
	2011년	309.1	5.6		420.5	30.3
	2012년	325.4	5.3		443.1	30.8
	2013년	342.0	5.1		489.8	32.6
박근혜 정부	2014년	292.8	4.0	4.0	533.2	34.1
	2015년	309.1	5.5		591.5	35.7
	2016년	325.4	2.9		626.9	36.0
	2017년	342.0	3.7		660.2	36.0
문재인 정부	2018년	428.8	7.1	8.7	680.5	35.9
	2019년	469.6	9.5		723.2	37.6
	2020년	512.3	9.1		846.6	43.6
	2021년	558.0	8.9		970.7	46.7
	2022년	607.7	8.9		1,067.7	49.4
윤석열 정부	2023년	638.7	5.1		1,134.4	50.4
	2024년(정부안)	656.9	2.8		1,196.2	51.0

주1) 국가채무 : 2009~2022년은 결산 기준,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4년은 정부안 기준
주2) 정부 분류는 본예산 편성 기준
* 자료 : 기획재정부

- 한편,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
-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 또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최대한 억제하여 국가채무 증가 폭을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8조원으로 축소

2024년 예산안의 국회 심사 방향

-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하에 재정의 낭비적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 과정의 중간 결과라 볼 수 있음.
- 습관적으로 편성되던 예산의 감액 또는 폐지라든지, 민간의 자생력을 높이고 사업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이 조정되는 등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 작업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
- 하지만, 무차별한 재정 살포 과정에서 이익을 향유하던 일부 기득권 계층과 야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정상적 예산 편성에 대해 가짜뉴스와 근거없는 의혹들을 무차별적으로 제기. 이에 국회는 2024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명확한 팩트 확인을 통해 가짜뉴스들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의무가 있음.
- 예산심사의 원칙은 명료. 민생을 위한 예산 중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각 예산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맞게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어 재정 낭비요소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
- 특히, 내년도 세입이 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예산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은, 과감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시도해 나갈 것
-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제기·의결된 사업들의 예산 증감이 타당한지도 더욱 면밀히 살펴볼 예정.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당리당략을 위한 포퓰리즘성 예산이 끼어들 여지 자체를 없앨 것

결어

-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국가 예산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졌음.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 없이 마구잡이로 재정을 탕진하고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신용카드를 마구 긁어대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
- 특히, 세금과 국가채무의 문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적정화 측면에서 끊임없는 논쟁거리.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을 줄이고,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입안자와 책임자는 재정 계획과 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
- 국회 역시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산 심사권 행사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도면밀하게 예산 심사에 임해야 할 것임. 특히 정부가 재정 정상화와 건전화를 천명한 만큼,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국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음.
-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며, 공짜 밥은 없음. 결국 누군가는 지불해야 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예산 심사에 임하겠음.

2024

예산안 토론회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토론 3

장 혜 영

정의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예산정책처 2024 예산안 토론회〉 토론문

장 혜 영
정의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 긴축은 긴축대로 적자는 적자대로, 진퇴양난 예산안
2. 국가기본계획에서 3조원 미달하는 기후대응예산
3. 연구개발과 교육재정 축소, 이렇게 결정할 일인가
4. 시대착오적 토건예산 증가, 일자리예산 축소
5. '약자복지 확대'와 그 이면
6. 시장과 정부만 존재하는 예산, '사회'는 없다
7. 23조 지출구조조정? 내역 말할 수 없으면 꺼내지도 말아야
8. 정의당의 요구: 부자감세 철회, 기후예산 확대, 삭감사업 공개, 민주적 예산안 심의

1. 긴축은 긴축대로 적자는 적자대로, 진퇴양난 예산안

-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20년 만의 최저 증가율 2.8%, 657조원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모순적 재정운용을 상징.
- 복합위기의 시대에 다른 선진국들은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교육과 복지에 사력을 다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긴축을 선택.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다 한들 결국 총예산의 규모가 정부의 의지와 역할을 웅변하는 것. 경기침체에서 안정화기능을 수행하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우는 문제를 노정.
- 이렇게 긴축을 긴축대로 했는데도 적자는 적자대로 나는 진퇴양난 예산안. 총지출은 657조원인데 예상 재정수입은 612조원에 머물러 통합관리재정수지 45조원, 관리재정수지 9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수. 재정준칙을 만들어 지키겠다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선조차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됨(-3.9%로 설정).

- 이유는? 경기침체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지난해 양당이 통과시킨 감세법안 규모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5년간 82조원, 올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확대, 이른바'K칩스법' 통과로 인한 감면액이 4년간 15조원 추산. 이외 유류세 및 개소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으로 인한 보유세 감면 등의 조치를 합하면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 이것은 이번 정권 내내 긴축을 강제하는 사슬이 될 것. 침체로 세입이 줄면 그것 자체로 세수부족을 야기하고, 경기확장 국면에서 감세폭도 커져 세입증가도 제약시키는 효과 발생.
- 윤석열 정부가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침체와 재정악화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우고 있음.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률에서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 중(1분기 -0.3%, 2분기 -0.4%). 현실에서는 감세가 긴축을 강제하고, 긴축이 성장률 저하를 야기하고, 성장률 저하가 다시 세수부족을 불러오고, 세수부족이 긴축을 강제하면서 또다시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만성적 재정위기의 패턴으로 향하고 있음.
- 대규모 감세의 수혜자는 대기업, 고소득층, 자산가 계층이지만, 침체의 고통은 빈곤층과 평범한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 기후대응과 과학기술 예산 축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약하는 요소.

2. 국가기본계획에서 3조원 미달하는 기후대응예산

-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5년간 9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 탄소중립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에 따라 2024년 투입이 계획된 예산은 17조 2000억원. 그러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14조 5000억원으로 무려 2조 7000억원이 삭감됨.
- 국가기본계획의 재정투입 계획으로 약속한 예산을 이렇게 대규모로 포기한 것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것. 긴급하고 후퇴 없는 대응이 필요한 기후위기 문제의 특성상 재정투입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정권의 긴축 방침에 휩쓸려 16%나 삭감.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58개 사업 중 72%인 329개 사업이 목표 미달. 여기서 4조 8000억원이 삭감됨. 증액사업은 14%인 65개에 불과함. 절반인 231개 사업은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도 총 2조원이 삭감됨.
- 대표적인 예시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들 수 있음.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탄소배출량 감축의 핵심 사업.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에서 그린리모델링 목표로 2030년까지 160만호를 설정했는데, 핵심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서도 33%인 635억원을 삭감. 2024년 목표에는 3200억원이 미달. 심지어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아무런 대안 없이 그대로 종료.

- 2024년 예산안이 제시한 20대 핵심 과제에 기후위기 대응은 들어가지도 못함.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중장기적 문제'일 뿐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님. 즉 예산안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기본계획의 재정투입 목표조차도 무시될 정도로 후순위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임.
- 이는 매우 안이한 대응.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GDP의 2.5~4%의 재원투입이 필요하다고 역설. 한국에 대입하자면 연간 50~80조원 규모. 독일의 경우 2024-2027 4년간 2120억 유로(약 308조원)을 사용하는 기후전환기금을 설립. OECD최하위인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율과 호주와 OECD 1위를 다투는 1인당 탄소배출량을 고려할 때, 애초 설정한 연간 18조원 수준의 재정투입계획도 매우 미흡.
- 기후대응기금 역시 탄소배출권 시장의 축소로 예산 규모가 2조 7000억원에 그치고 있음. 과도한 배출권 무상할당 때문에 탄소배출권 가격은 점점 더 떨어지고, 산업계는 비용을 부담한 게 아니라 도리어 할당된 배출권으로 지난 7년간(2015~2021) 8500억원의 수익을 올림. 2024년 배출권 수익은 지난 예산안보다 3000억원이 축소된 4100억원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한 예산안으로는 결코 기후재난 미래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됨.

3. 연구개발과 교육재정 축소, 이렇게 결정할 일인가

- 연구개발 예산은 무려 16.6%, 5조 2000억원이 감액. 사상 초유의 삭감임. 대한민국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건 국가의 대규모 R&D 투자의 꾸준한 누적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 그렇기에 정당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는 재정상황이 어렵더라도 이런 시도는 자제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뒤집은 것.
- 연구개발 분야는 단기 성과를 쫓기보다 국가가 실패를 인내하며 꾸준히 확대해야 할 예산으로 판단함. 여기에 합리적 이유도 없이 '이권카르텔' 딱지를 붙여 총액을 일괄 무차별적으로 삭감해 버리는 방식은 합리적 조정이라고 볼 수 없음. 감액대상에는 과기부 및 기재부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사업의 73%가 포함되는가 하면, 탄소중립 기반 구축프로그램 예산이 1700억원, 31%가 삭감되는 등 국정과제 관련 핵심 예산도 축소. 문제사업 정리와 효율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방식은 해당 목적 달성과도 거리가 먼 형태임.
- 교육예산도 크게 축소.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원, 전년도에 비해 10% 삭감. 전체 세입규모에 비례하는 교부금의 특성상 세입예산 축소의 타격을 그대로 받은 탓.
- 경기와 세수에 따라 교육재정이 크게 출렁이는 구조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의 여파가 그대로 미치는 양상. 이는 지방교부금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현상으로(15조 4000억원 감소 예상) 초과세수에 의한 갑작스런 증액에 따른 비효율적 집행이나, 감액에 따른 재정절벽 파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

4. 시대착오적 토건예산 증가, 일자리예산 축소

- 연구개발 예산까지 축소한 윤석열 정부는 토건예산은 지켜내고 1조원을 증액함. 긴축재정이 필요한 국면은 아니라고 보지만, 설령 긴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 타당성을 평가하기 용이하고 사업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복잡한 이해관계와 개발 난립으로 그 효용성을 가장 의심받는 SOC사업부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렇게 토건예산은 늘리면서 고용, 실업, 직업훈련 예산은 1.6조원 삭감. 침체의 위협에 국민들을 보호하고, 잦은 경기변동으로 '이력 효과(hysteresis)'로부터 잠재적 역량 훼손을 방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 고용 관련 예산은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 그나마 잼버리 사태로 본질이 드러난 새만금 SOC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으로 판단함. 나아가 새만금 사업 자체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을 비롯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각종 신공항들의 재검토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
- 지역의 특정 집단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토건인프라 중심의 지역개발을 넘어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민에게 고루 이익이 되는 새로운 지역균형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SOC개발로 나아가야 함. 이런 고려가 부족한 무차별적 토건예산의 확대는 제2, 제3의 잼버리 사태를 불러오고 국토의 생태적 기초를 파괴할 우려가 있음.

5. '약자복지 확대'와 그 이면

-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약자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고 주장. 그러나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 확대는 2020년에 중위소득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한 원칙을 준수한 결과에 불과하지 치적이라고 내세울 일은 아님. 정부가 자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정부를 운용하는 건 의무의 영역. 당연하게도 코로나 핑계로 이 원칙을 저버리고 기준중위소득을 낮은 증가율로 묶어둔 민주당 정부는 크게 비판받아야 마땅함.
- 생계급여가 누구나 위기에 처해도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1인 가구 최대 71만원은 많이 올렸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함. 더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나치게 엄격한 지급기준도 완화하고 부양의무기준은 전면 폐지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과제.
- 크게 늘렸다고 하는 중증장애인 복지도, 뜯어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에 편중되었고, 장애인 기존 돌봄 영역은 거의 확대하지 못함. 장애인 돌봄 문제의 핵심은 평균 4시간에 불과한 불충분한 서비스와 최저임금 수준의 수가인데 정작 여기에는 변화가 없음. 이번에 확대한다는 발달장애인 돌봄도 전체 필요인원의 5% 수준이라 혜택이 제한적.

- 장애인 예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문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하지만 여전히 1조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 운용. 그러면서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인건비 지원은 배제되는 등 예산이 충분치 않고, 저상버스 예산은 삭감되었으며, 중증장애인이 동료 장애인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됨.
- 한편 재정긴축이라는 조건 속에서 복지를 확대했으니 다른 영역에서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보건, 복지, 고용의 지출 증가는 7.5%인데, 의무지출 증가가 대부분인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13.7%. 결과적으로 다른 보건과 고용 영역의 지출 증가는 크게 제약된 것. 감세로 긴축재정을 하는 정권의 복지확대는 늘 다른 영역의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 셈. 추후 의무지출이 전체 예산의 55%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긴축과 기계적인 재정건전성 강조로 인해 재량에 의한 복지지출 대폭 축소가 우려됨.

6. 시장과 정부만 존재하는 예산, '사회'는 없다

- 윤석열 정부가 바라보는 세상은 시장과 정부가 존재할 뿐, 이외의 사회적 영역에 대한 고려가 없음. 자유의 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시장의 작동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역할이며, 이 작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을 생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제하는 정도를 정부의 역할에 포함시킴.
- 이외 시장적 가치가 없거나 이윤창출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시민사회문화 영역과, 젠더적 가치는 생산성이 부재한 '기생'요소로 판단해 적출을 시도하고 적대시하는 전략을 고수. 이것이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것.
- 이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 여성, 도서 관련 예산을 꼽을 수 있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배정된 예산은 1000억원 이상 삭감되어 절반 이하로 축소됨. 지역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역시 1200억원 삭감.
- 성평등 관련 정책예산도 일제히 삭감. 여가부 예산은 늘었으나 이는 가족정책 예산 확대에 말미암은 것. 성평등 예산은 전체적으로 2.5% 삭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여성폭력 관련 예산들을 대폭 축소. 성인지 예산 범위도 지난해에 비해 9조원을 축소시킴.
- 도서, 출판, 서점과 관련 지원예산도 대폭 삭감. 문체부 예산은 3.5% 늘었지만, 출판산업 육성산업은 12%가 삭감됨. 독서문화 증진사업,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문학나눔도서보급 등이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 이러한 예산배분은 앞서 언급한 '카르텔' 지목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음.

7. 23조 지출구조조정? 내역 못 말한다면 꺼내지도 말아야

- 정부는 재정도 아끼면서 복지도 늘리고 국가의 미래에도 투자하겠다고 함. 홍보자료만 보면 이보다 더 나은 예산안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칭찬 일색임. 그러나 정부는 그 이면을 보여주지 않음. 이번 예산안은 '역대급' 긴축예산으로, 크게 늘어난 예산이 있다면 이를 위해 삭감된 예산이 있을 수밖에 없음.
-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3조원 지출구조조정을 내세우며 한 설명임. 이권카르텔과 정치 보조금 예산을 삭감해 구조조정을 결행했다는 것. 그렇다면 어디에서 예산을 깎았는지 관련자료를 삭감근거와 함께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임.
- 정부는 국민들에게 무엇이 이권카르텔인지, 무엇이 나쁜 보조금인지 소상하게 알릴 의무가 있음. 그 예산 삭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임.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는 없음.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함.
- 지난해 단행된 24조원 지출구조조정도 기재부는 끝까지 삭감 리스트를 온전하게 공개하지 않은 전례가 있음. 더 이상 이런 은폐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봄. 삭감 내역과 각 삭감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지출구조조정 홍보와 광범위한 카르텔 지목행위는 비합리적 정치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8. 정의당의 요구: 부자감세 철회, 기후예산 확대, 삭감사업 공개, 민주적 예산안 심의

- 2024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로부터 출발. 정부지출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는데 대규모 감세와 경제침체 속에서 급감하는 세수환경,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인해 긴축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
-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는 재정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봄. 감세와 재정건전성, 지출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 적어도 하나는 포기해야 함. 가장 바람직한 선택지는 부자감세의 철회.
-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약자들의 삶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믿음. 연구개발 예산의 복구는 당연하며,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경천동지할 수준으로 확장해야 함. 세입변동에 따른 교육 및 지방예산의 급감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 새만금을 비롯한 각종 개발인프라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일자리 위기 시대에 고용예산 삭감은 어불성설.

- 늘렸다고 하는 약자복지는 여전히 충분치 않으며 문턱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예산과 제도개선이 절실함. 시설에 집중되고 있는 장애인 예산의 관점을 자립 보장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시장이 담당할 수 없는 사회적 경제와 도서문화, 성평등 같은 사회적 영역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정부가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됨.
- 한편 정부는 23조원 지출구조조정의 상세내역과 삭감사유를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해야 함. 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의도로 어떤 예산을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음. 납세자이자 주권자이기 때문임. 예산안의 심의는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이른바 소소위와 같은 비공개 회합에 의한 밀실예산 관행은 사라져야 함. 정의당은 이상의 관점에 근거해 꼼꼼하고 성실하게 예산안 심의에 임할 것임.

2024

예산안 토론회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토론 4

이 상 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4년 예산안 정량 분석 및 정성 분석

이 상 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I.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일까? : 총수입 2.2%, 총지출 2.8% 증가 건전재정 위배

- 정부는 24년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제한하여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고 함. 그러나 총수입은 2.2% 감소되고 총지출은 2.8% 증가함. 총수입과 총지출이 -5%p 차이로 재정 건전성 악화됨.
- 2010년 이후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가 -5% 이상 벌어진 일은 당시 정부가 적극적 재정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음.

| 표 1 2010~2024년 총수입, 총지출 변화 비교 |

단위: % %p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수입	290.8	314.4	343.5	372.6	369.3	382.4	391.2
총수입 증감률	-0.1%	8.1%	9.3%	8.5%	-0.9%	3.5%	2.3%
총지출	292.8	325.4	342.0	355.8	375.4	386.4	400.5
총지출 증감률	2.9%	5.3%	5.1%	4.0%	5.5%	2.9%	3.7%
총수입증감률 -총지출증감률	-3.0%p	2.6%p	4.0%p	3.4%p	-4.9%p	-2.0%p	-0.6%p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수입	447.2	476.1	481.8	482.6	553.6	625.7	612.1
총수입 증감률	7.9%	6.5%	1.2%	0.2%	14.7%	13.0%	-2.2%
총지출	428.8	469.6	512.3	558.0	607.7	638.7	656.9
총지출 증감률	7.1%	9.5%	9.1%	8.9%	8.9%	5.1%	2.8%
총수입증감률 -총지출증감률	0.9%p	-3.0%	-7.9%p	-8.8%p	5.8%p	7.9%p	-5.0%p

- 실제로 내년도 통합재정 수지는 -44.8조원으로 23년도 본예산-13.1조원보다 크게 증대함. 특히, 관리재정수지도 -92조원으로 크게 확대되며 국가채무도 1134조원에서 1196조원으로 62조원 증대됨.

| 표 2 24년 예산안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변화 |

단위: 조원, %

	23년 예산	24년 안	증감액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13.1 (△0.6%)	△44.8 (△1.9%)	△31.7 (△1.3%p)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58.2 (△2.6%)	△92.0 (△3.9%)	△33.8 (△1.3%p)
국가채무(GDP 대비)	1,134.4 (50.4%)	1,196.2 (51.0%)	+61.8 (+0.6%p)

자료: 2024년 정부 예산안

- 그런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국제적으로 비교불가능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준임. 특히, 융자지출 등 자본적 지출과 일반 소비적 지출의 구별이 없어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함. 예를 들어 융자지출 등 자본적 지출은 추후에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발생하기에 다른 소비적 지출과는 달리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여력 약화는 제한적임. 이에 IMF등 국제 기준(GFS) 재정지출 및 재정수지에는 융자지출액을 다른 소비성 지출과는 구분하여 지출규모를 조정함.
- 반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총지출 통계에는 다른 소비성 지출과 구분 없이 융자지출 등 자본지출 전액이 포함됨.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기에도 어려운 개념임. 이에 IMF 기준을 통해 우리나라 수입, 지출 및 재정수지 변화를 파악해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기에 더 합당한 개념임.
- 특히, 우리나라가 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IMF는 최근 2023년 10월 2일 재정보고서(Fiscal Monitor) 를 발표함. 이전 2023년 4월 발표한 자료 이후 우리나라 2023년 세수 결손과 202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으며 2023년 수치 및 2024년 수치가 큰 폭으로 변화되었음. 이에 IMF 가 10월 발표한 재정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근 재정 기조를 파악해보고자 함.
- 실제로 IMF가 지난 2023년 4월 발표한 재정보고서에는 2023년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균형재정(0%)로 예측하고 2024년에는 -0.2%로 예측했으나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은 -1.2%, 2024년은 -0.9%로 재정수지 전망을 악화한 것을 보면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음.
- 2014년 이후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코로나19전까지는 항상 흑자를 기록했음. 지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운용했다고 홍보는 했으나 실제 재정수지는 코로나 이전 항상 흑자였음.

- 다만, 2020년 코로나19때 4차 추경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 재정조치로 GDP 대비 −2.2%를 기록했음. 다만 2021년에는 다시 균형재정을 회복했음.
- 반면, 2022년, 2023년, 2024년은 모두 적자를 기록함. 즉, 2022년부터 재정운용은 건전재정에서 다소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임.
- 특히,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국제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에 선진국 재정수지와 비교한 '벤치마크 재정수지'를 파악해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인 2020년, 2021년에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재정수지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음. 즉,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했다는 의미임. 그러나 2024년도 우리나라 '벤치마크 재정수지'는 3.5%p 차이로 다소 줄어들었음.

| 표 3 IMF 선진국 통합재정수지(overall balance) 변화 비교 |

단위: GDP 대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p	2023e	2024e
IMF 선진국[1] 평균	−3.1	−2.6	−2.7	−2.4	−2.4	−3	−10.2	−7.5	−3.3	−5.2	−4.4
G7	−3.6	−3	−3.3	−3.3	−3.3	−3.8	−11.6	−9.1	−4.1	−6.5	−5.6
G20 선진국	−3.4	−2.9	−3.1	−3	−3	−3.6	−11.2	−8.7	−4	−6.1	−5.3
프랑스	−3.9	−3.6	−3.6	−3	−2.3	−3.1	−9	−6.5	−4.8	−4.9	−4.5
독일	0.6	1	1.2	1.3	1.9	1.5	−4.3	−3.6	−2.5	−2.9	−1.7
이태리	−3	−2.6	−2.4	−2.4	−2.2	−1.5	−9.7	−9	−8	−5	−4
일본	−5.6	−3.7	−3.6	−3.1	−2.5	−3	−9.1	−6.2	−6.9	−5.6	−3.7
한국	0.6	0.5	1.6	2.2	2.6	0.4	−2.2	0	−1.6	−1.2	−0.9
스페인	−6.1	−5.3	−4.3	−3.1	−2.6	−3.1	−10.1	−6.8	−4.7	−3.9	−3
스웨덴	−1.5	0	1	1.4	0.8	0.6	−2.8	−0.1	0.7	−0.4	−0.6
스위스	−0.2	0.5	0.2	1.1	1.3	1.3	−3	−0.3	0.9	0.1	0.4
영국	−5.5	−4.5	−3.3	−2.4	−2.2	−2.2	−13	−8.3	−5.5	−4.5	−3.9
미국	−4	−3.5	−4.4	−4.8	−5.3	−5.7	−14	−11.6	−3.7	−8.2	−7.4
우리나라−선진국	3.7	3.1	4.3	4.6	5	3.4	8	7.5	1.7	4	3.5

1) IMF가 선진국(advanced economies)로 분류하는 국가는 G7국가(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및 호주, 벨기에, 체코,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홍콩, 그리스, 싱가폴 등 약 40개 내외의 국가를 의미함.

- 결국, 종합재정수지에서 각종이자효과를 제거하고 경제상황 변화도 제거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primary balance)가 가장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재정수지임.
-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를 통해 우리나라 최근 재정전략을 파악해봄. 즉, 과거 재정의 영향을 제거하고 경기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를 통해 우리나라 최근 재정 수지 예측을 판단해 봐도 2023년, 2024년 모두 코로나19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표 4 IMF 선진국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primary balance) |

단위: GDP 대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p	2023e	2024e
IMF 선진국 평균	−0.5	−0.4	−0.7	−0.8	−1	−1.8	−6.6	−5.7	−3.3	−3.9	−2.8
G7	−0.7	−0.5	−1	−1.3	−1.4	−2.1	−7.4	−6.8	−3.8	−4.6	−3.3
G20 선진국	−0.7	−0.5	−0.9	−1.1	−1.2	−2.1	−7.2	−6.5	−3.7	−4.3	−3.1
프랑스	−0.5	−0.3	−0.3	−0.4	−0.2	−1.7	−4.8	−4	−2.5	−2.7	−2.3
독일	2	2.2	2	1.7	2.3	1.9	−2.5	−2.6	−2.2	−1.7	−0.3
이태리	3.7	3.4	3	2.2	2.1	2.4	−2.8	−3.2	−3.5	−1	0.3
일본	−4.9	−3.4	−3.4	−2.7	−2.2	−2.6	−7.5	−4.9	−6.5	−5.5	−3.7
한국	0.3	0.4	1.5	2	2.2	0	−2	−0.3	−1.9	−1.3	−0.9
스페인	1.6	0.4	−0.2	−0.2	0	−1	−2.6	−2.1	−2.3	−1.8	−0.6
스웨덴	−0.8	−0.6	0.7	0.9	0.3	−0.1	−1.6	−0.7	0.3	−0.1	0.1
스위스	0	0.8	0.4	1.3	1.1	1.3	−2.3	0	0.9	0.2	0.5
영국	−1.2	−1.1	−0.1	0.5	0.2	−0.3	−9.7	−5.6	−3.2	−2.3	−1.4
미국	−0.8	−0.7	−1.6	−2.3	−2.9	−3.7	−8.6	−9	−4.1	−6	−4.6
우리나라−선진국	0.8	0.8	2.2	2.8	3.2	1.8	4.6	5.4	1.4	2.6	1.9

II. 2024년 예산안,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산물? : 내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자동 감소가 핵심

- 정부는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건전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했다고 함. 그러나 24년도 총지출 증가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2.8% 증가로 제한적으로 증대된 이유는 정부가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수행한 덕분이 아니라 내년도 내국세가 -10.1% 줄어들면서 자동으로 연동되는 지방 이전재원이 15.4조원 삭감되었기 때문임.
- 내국세 감소 및 종부세 감세로 인해 줄어든 지방 이전재원은 15.4조원임. 만약, 내국세가 줄어들지 않아 이전재원이 15.4조원 줄어들지 않았다면, 24년 총지출은 5.3%(672.3조원) 증대할 것임.

| 표 5 24년 지방이전재원 삭감 규모 |

단위: 조원, %

	23년 본예산	24년 예산안	24년 -23년 차액	24년 증감률	If, 내국세 감소 없이 지방이전재원 유지시
내국세	358	321.7	-36.3	-10.10%	
지방교부세	75.3	66.8	-8.5	-11.30%	
교육교부금	75.8	68.9	-6.9	-9.10%	
지방 이전재원 합	151	135.7	-15.4	-10.20%	
총지출	638.7	656.9	18.2	2.80%	672.3(5.3%)

자료: 이상민(2023) 24년 지방이전재원 감소 효과 제외한 총지출 규모

III. 분야별 예산 배분 분석

1) 총론

- 기획재정부 예산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액 656.9조원이 어떤 분야에 배분되는지 표로 설명되어 있음.
- 그런데 각 분야별 예산 배분액을 다 합치면 656.9조원이 아니라 661.5조원이 나옴. 즉,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분 내역은 중복과 누락 방식을 통한 잘못된 방식으로 예산 배분내역을 작성함.

| 표 6 기재부가 작성한 2024년도 분야별 예산 배분내역 |

단위: 조원, %

	'23년 본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율
총지출	638.7	656.9	18.1	2.80%
1. 보건·복지·고용	226	242.9	16.9	7.50%
2. 교 육	96.3	89.7	△6.6	△6.9%
3. 문화·체육·관광	8.6	8.7	0.1	1.50%
4. 환 경	12.2	12.6	0.3	2.50%
5. R&D	31.1	25.9	△5.2	△16.6%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	27.3	1.3	4.90%
7. SOC	25	26.1	1.1	4.60%
8. 농림·수산·식품	24.4	25.4	1	4.10%
9. 국 방	57	59.6	2.6	4.50%
10. 외교·통일	6.4	7.7	1.2	19.50%
11. 공공질서·안전	22.9	24.3	1.4	6.10%
12. 일반·지방행정	112.2	111.3	△0.9	△0.8%
실제 합계 금액	648.1	661.5		

자료: 기획재정부(2023) 2024년 예산안 홍보자료

- 이에 분야별 예산 배분내역은 우리나라 예산 분류체계에 맞춰서 16개 분야로 작성해야 할 것임. 이에 16개 분야로 24년 예산안을 분석하고자함.
- 24년 총지출은 656.9조원임. 2023년 예산안 638.7조원에서 2.8% 증가된 규모임.

| 표 7 2023년 본예산 대비 2024년 예산안 분야별 감액 및 증액 규모 |

단위: 십억원

	23년 본예산	24년 예산안	감액된 세부사업액	증액된 세부사업액	순증감액	증감률
총합계	638,728	656,851	-56,492	74,615	18,124	2.8%
교육	96,273	89,655	-12,474	5,857	-6,618	-6.9%
일반·지방행정	112,154	111,262	-11,118	10,226	-893	-0.8%
사회복지	205,976	223,876	-6,392	24,292	17,900	8.7%
국방	55,286	57,572	-4,749	7,035	2,286	4.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004	27,269	-4,305	5,570	1,265	4.9%
교통및물류	20,821	21,773	-3,876	4,828	952	4.6%
보건	20,027	19,006	-3,728	2,707	-1,021	-5.1%
농림수산	24,377	25,377	-2,129	3,129	1,000	4.1%
과학기술	9,862	9,124	-1,609	871	-737	-7.5%
환경	12,249	12,555	-1,608	1,914	306	2.5%
통신	8,985	9,294	-1,360	1,669	309	3.4%
문화및관광	8,606	8,738	-1,247	1,379	132	1.5%
국토및지역개발	4,167	4,362	-738	933	195	4.7%
공공질서및안전	22,931	24,333	-592	1,994	1,402	6.1%
통일·외교	6,409	7,656	-566	1,813	1,247	19.5%
예비비	4,600	5,000	0	400	400	8.7%

대한민국 정부, 2024년 예산안

- 통일외교 분야(19.5%, 1.2조원)가 많이 증가된 이유는 ODA 사업증대로 인한 것이며 ODA사업만 3.6조원에서 5조원으로 1.4조원(40%) 증대되었음
- 예비비 분야가 4.6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되었음. 예비비 증대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악화를 의미
- 사회복지 분야는 206조원에서 223.9조원으로 17.9조원(8.7%) 증대되었음.
- 국방 분야는 55.3조원에서 57.6조원으로 2.3조원(4.1%) 증대되었음. 이는, 항공기 사업에 0.8조원(32.9%). 인건비가 0.8조원(4.7%) 증액되었기 때문임.
- 과학기술 분야는 8.9조원에서 9.1조원으로 -7.5%(-0.7조원) 감액되었음. 이는 R&D 감액에 의한 것으로 특히, 출연연구기관 지원이 0.6조원(-17.2%),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이 0.3조원(-34.9%) 감액되었기 대문임.

- 교육 분야는 96.3조원에서 89.7조원으로 -6.9%(-6.6조원) 감액되었음. 이는 내국세 감소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임.
- 보건 분야는 20조원에서 19조원으로 -5.1%(-1조원) 감액되었음. 이는 보건의료 부문 중 코로나19와 관련있는 사업 삭감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R&D삭감, 만성질환 예방관리(-48.6%), 국가결핵예방(-29.2%), 국가금연지원서비스(-12.2%), 희귀질환자 지원(-31.2%),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65.8%), 119구급대지원 사업(34.7%)이 삭감되었기 때문임.

2) 사회복지 분야 분석

- 보건복지 분야는 증액된 세부사업 금액도 24.3조원으로 크고 감액된 세부사업금액도 6.4조원으로 큰 규모를 차지함. 감액 사업과 증액사업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 공적연금 부문이 10조원 증액되고 0.5조원 감액되어 9.5조원 순증(13.4%) 이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대(결과)
- 주택 부문이 5.9조원 증액되고 1.9조원 감액되어 4조원 순증(11.8%) 이는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사업이 증대되었기 때문임. (의도)
- 노인 부문이 2.4조원 순증(10.3%) 이는 기초연금이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라 증대(결과)
-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1.9조원 증액되고 0.2조원 감액되어 1.7조원 순증(8.8%) 이는 기준중위소득기준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기준 완화(중위소득 30%-> 32%) (의도)
- 고용 부문이 1조원 증액되고 2.4조원 감액되어 1.4조원 순감(-5.9%)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급여 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임.(의도)

| 표 8 보건복지 분야에 속한 전체 부문 예산변화 |

단위: 십억원, %

분야	부문	23년 본예산	24년 예산안	감액	증액	순증감액	증감률
사회복지	고용	23,632	22,244	-2,426	1,038	-1,387	-5.9%
사회복지	고용노동일반	634	650	-8	23	16	2.5%
사회복지	공적연금	71,325	80,856	-463	9,995	9,532	13.4%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19,135	20,826	-161	1,851	1,691	8.8%
사회복지	노동	10,728	10,749	-262	282	21	0.2%
사회복지	노인	23,229	25,633	-56	2,461	2,404	10.3%
사회복지	보훈	6,247	6,469	-114	336	222	3.5%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1,013	1,049	-46	82	36	3.6%
사회복지	아동·보육	9,848	10,856	-636	1,645	1,009	10.2%
사회복지	여성·가족·청소년	1,530	1,678	-56	203	148	9.7%
사회복지	주택	33,441	37,404	-1,916	5,878	3,963	11.8%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5,214	5,462	-249	497	248	4.8%
보건복지 분야 합		226,003	242,882	-10,121	26,998	16,882	7.5%

2024

예산안 토론회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토론 5

성 태 윤

연세대학교 교수

MEMO

MEMO

MEMO

MEMO

MEMO

발간일 2023년 10월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23